



주간 통일정세

2008-1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 ‘북한인권보고관’ 연장 결의 “전면 배격”(3/29, 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키로 결의한 것은 “미국의 사측(사주)을 받은 EU(유럽연합)와 일본의 반공화국(북한) 정치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 그러나 외무성 대변인은 이 결의에 한국이 찬성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음.
- 대변인은 결의안이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한 EU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일부 불순 세력들을 끌어모아 겨우 강압채택”됐으며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데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강요된 ‘결의’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우리 사이의 협력을 파괴하고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후과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 北여맹 새 위원장에 로성실 선출(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제52차 전원회의에서 박순희 위원장을 “해임 소환”하고 로성실 부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신임 로 위원장은 2002년 2월 여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2007년 1월 여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으며 같은 해 5월과 9월 여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과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 2000년부터 여맹을 대표해온 전임 박 위원장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음.
- * 여맹은 1945년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을 전신으로 한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55세의 여성이 가입할 수 있음.

● 농근맹 토끼사육 열성자회의 개최(3/27, 평양방송)

-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26일 평양에서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를 개최, 회의에는 김중린 당 중앙위 비서와 리경식 농업상, 강창욱 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석



나. 경제 관련

● 北 SW개발 언어처리, 인공지능에 강점(3/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으며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목표로 삼은 2012년이면 “전면적인 개화기”를 맞을 것이라고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정보과학기술대학의 류순렬 학장이 언급했다고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의 정보산업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북한의 정보산업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발전,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수준이 됐다고 하며, 북한이 최근 외국의 최신설비를 들여다 공장과 기업을 현대화할 때 “이들 설비의 조종에 관한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그 공장과 기업의 실정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짤다”고 소개
-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정보산업지도국 산하에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정보센터(PIC)를 비롯한 전문기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 그리고 성, 중앙기관에 구성된 정보센터 등이 망라되어 프로그램을 개발

● ‘친환경 농약’ 개발, 전국 보급(3/29,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업과학원이 최근 다양한 생물농약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조선중앙방송은 농업과학원 식물보호연구소 과학자들이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 생산 실천에서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보도

● 北 ‘700리 물길’ 통수 시작(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봄 농사철을 맞아 ‘700리 물길’인 평양북도 백마-철산수로에 물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당국이 2003년 3월 착공해 2005년 10월에 완공한 뒤 “웅대한 대자연 개조”로 부르고 있는 백마-철산 수로의 이번 통수(通水)로 “평안북도의 여러 시·군의 관개용수가 보장되고 있다”고 통신은 언급
- 총 연장 279.3km인 백마-철산수로는 평북 백마저수지에서 피현-룡천-염주-동림-철산 등 5개 군, 22개 리와 신의주시 일부 지역의 농경지 4만6천여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 경제재건 위해 ‘천리마’ 정신 강조(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사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후 천리마 대고조 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어 있는 노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언, 그러나 신문은 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는 밝히지 않음.

● **경제연구, 자본주의시장 진출위해 수출구조 개선 촉구(2008년 1월호, 경제연구)**

-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뚫고 들어가야 하며 그에 맞게 수출입 구조와 무역방식을 우리 식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연구’ 최근호(2008.1호)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제압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짓부수기 위해 서라도” 자본주의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다. 군사 관련

● **서해상서 미사일 발사 시도(3/28, 연합)**

- 북한이 3월 25~26일 서해상에서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군 소식통은 28일 “북한군이 25일 오전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것이 포착됐다”고 발표

* 북한군은 2007년 말 시작돼 4월까지 진행되는 동계훈련에서 전투기 출격과 전차 포사격 훈련은 물론 일부 미사일부대의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서해상에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3/28, 연합)**

- 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해상에서 옛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艦對艦) 미사일(사정거리 46~50km)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 북한이 함정에서 상대방 함정을 공격하는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년 만의 일임.

- 정부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황해남도 비파곶·초도 인근 해상에 있던 미사일 고속정에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북서쪽으로 발사했다”며 “미사일들은 최대 사정거리를 모두 날지 않고 20여km쯤 날아간 뒤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6월 KN-02 단거리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사정거리 120km) 발사 이후 9개월 만임.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국제기구와 결핵 퇴치 공조(3/29, 조선신보)**

- 북한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으로부터 결핵 진단 장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를 강화,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에바 에릭슨 IFRC 동아시아지역 담당 국장과 테즈 알리아 세계보건



기구(WHO) 평양대표 등을 초청해 북한의 결핵 통제 현황을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와 예술소품 공연 등을 진행

- 이 행사에서 에릭슨 국장은 “연맹(IFRC)이 조선(북한)에서 벌어지는 결핵 통제를 위한 활동을 계속 후원할 것”이라며 “각지의 전문 의료 봉사 기관들에 결핵균 검사용 현미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왈리아 대표도 “결핵 예방을 위한 2년간의 캄빠니아(캠페인)를 국제적 판도에서 벌어나갈 기구의 계획”을 발표
- 북한 보건성 리봉훈 부상은 행사에서 “결핵 퇴치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모든 보건 기관에서 결핵 예방을 위한 대중 계몽사업을 벌여 “가까운 앞날에 ‘결핵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언급

● **평양 전체 주민 질병예방 건강검진(3/29, 조선신보)**

- 평양시 보건 당국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이번 건강 검진은 “질병들을 제때에 찾아내 조기에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란봉구역과 락랑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보건기관들에서 주민 검진이 시작됐다”고 신문은 보도
- 신문은 보건 당국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종양과 등 전문과별로 검진을 실시한 뒤 발견된 질병과 환자상태에 따라 종합진료소와 구역·시급병원으로 보내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北, 제주 아레슬링대회 금1, 은1, 동2(3/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08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3.18~23)에서 금, 은 각 1개와 동메달 2개를 땀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이번 대회가 제주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아시아 18개국과 지역에서 4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양춘성 선수가 자유형 66kg급에서 우승했다고 보도

●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40주년 기념보고회 개최(3/26,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논문 ‘전염병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40주년 기념보고회가 25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행사에는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김정웅 보건성 부상 등이 참석

● **함북 청진서 여성 1만명 집단항의(117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 때문에 3월 초 함북 청진에서 1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집단항의’를 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의 주간 북한소식지가 주장

- **北문학지, 윤동주는 반일 애국시인(2008년 2월호, 조선문학)**
 - 북한의 월간 문학지 ‘조선문학’ 최근호(2008.2)는 시인 윤동주(尹東柱, 1917.12-1945.2)를 “해방전 진보적 시 문학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한 애국 시인”이라고 평가

- **9월부터 초등3년 영어·컴퓨터 조기교육(3/26, 조선신보)**
 - 2008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영어 및 컴퓨터 조기교육을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조선(북한)의 교육부문에서도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에 관심을 돌리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중학교(중·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기초부문을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
 - * 북한의 소학교는 4년제이므로 학생들은 종래보다 2년 앞당겨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는 셈임.

- **北여성지, 에이즈 예방 홍보(2008년 2월호, 조선여성)**
 - 여성잡지가 북한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에이즈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독자들에게 주문
 - * 북한은 2007년 12월 평양에서 WHO, 유엔에이즈기구(UNAIDS),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관계자들과 각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세계 에이즈의 날’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에이즈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 북한은 1988년 ‘국가에이즈위원회(National AIDS Committee)’를 창설했으며 에이즈예방사무소를 중앙위생방역소에 통합, 각 도(道) 위생방역소에서 에이즈 검역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피임기구 사용 등 에이즈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음.

- **고구려 ‘자주외교’ 역사서 출간(3/25, 조선신보)**
 - 북한이 고구려의 자주적 대외정책 등을 다룬 역사서 ‘조선단대사’ 제3권을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새 학년도 개학준비 분주(3/25, 조선중앙방송)**
 - 4월 1일 새 학년도 시작을 앞두고 개학 준비에 분주한 모습
 -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로 바쁨.



- **개성인삼 화장품품 외국여성에 인기(3/25, 조선중앙통신)**
 - 개성인삼을 원료로 한 북한 화장품 ‘봄향기’가 북한에 있는 러시아인 등 외국인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아리랑 공연 관광객 모집 사이트 개설(3/25, 연합뉴스)**
 - 북한의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소개하고 참관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www.dprk-tour.com)가 최근 개설
- **北잡지에 ‘영문법 강좌’ 등장(2008년 1월호, 예술교육)**
 - 북한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영문법 강좌’가 등장, 북한 2.16예술교육출판사가 발행하는 계간지 ‘예술교육’은 24일 입수된 최신호(2008년 1호)에서 예술관련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는 ‘강좌’라는 코너에 김태하 부교수의 ‘영어동사 do의 문체적 특성의 활용문제’라는 글을 실음.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남북, 6자회담 에너지 실무접촉 “정상 진행”(3/28, 연합뉴스)**
 - 남북한은 28일 판문점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접촉 이틀째 회의를 개최, 10·3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집중 협의
 -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측은 비(非) 중유 지원용 설비자재의 품목과 사양을 제시했으며 북한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우리측에서 권용우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이, 북측에서는 진 철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4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남북한과 중국 간 3자협에서 최종 결정되며 북한의 불능화의 대가로 각종 설비 자재 등이 제공

나. 북·미 관계

- **北, 美주장 고집하면 핵무력화 심각한 영향(3/28, 외무성대변인 담화)**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등과 관련,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언급
 - 대변인은 담화에서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우라늄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협조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꾀본 적이 없다.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 또한 “미국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부시 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이 제기한 UEP 문제에 관해, 답화는 “미국측이 수입알루미늄의 행처만 밝혀주면 ‘우라늄농축 의혹’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미국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시편(실험재료)도 제공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자신들이 양보했다고 주장
-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도 답화는 “시리아의 해당 대상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돼 이 문제는 더 해명할 필요도 없게 됐으니 그저 핵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조선(북한)측의 공약을 재확인 해주면 되겠다고 (미국이) 요청했다”고 답회는 주장
- 답화는 “6자회담 10·3 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지난해 11월 핵신고서를 작성해놓고 미국에 통보한 바 있음에도 미국과 협상에 응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가 2002년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북미관계를 파탄시키고 정세를 악화시켜 “결국은 우리를 핵보유어로 떠밀었다”고 주장

● 노동신문, 美의 ‘北 위협설’은 날조(3/25, 노동신문)

-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설 등을 제기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과 주한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해 꾸며낸 ‘자작 날조’라고 노동신문이 주장

다. 북·중 관계

● 신임 北 무역상, 中대사와 경협 현안 논의(3/27, 평양주재중국대사관 웹사이트)

- 북한의 대외경협을 책임지고 있는 리룡남 무역상이 취임하자마자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 경협을 논의, 27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리 무역상은 3월 14일 평양의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류 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구체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리룡남 무역상은 최근 무역상 부상에서 승진한 인물로 2007년 9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3차 양국의 경협협의체인 북중 경제무역협조 회의에 북한측 대표로 참석, 천젠(陳健)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회담을 가졌던 인물, 2005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회의부터 참가해 양국 경협 현안에 대해 아주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北, 中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비난(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티베트 시위에 대한 중국의 무력진압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를 정치화하여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들의 시도”라고 비난

라. 북·일 관계

● **노동신문, 日대북제재 연장 추진 비난(3/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일본이 4월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대북 제재조치를 연장하려는 것은 6자회담 참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유관국들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하고 “누구든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이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

마. 기타외교 관계

● **北김영남 상임위원장, 제20차 아랍연맹정상회의에 축전 발송(3/29, 조선중앙통신)**

● **北김영일 내각총리, 벨기에의 이브 레테름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발송(3/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귀국(3/29, 평양방송)**

- 최상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이 인도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창립 30돌 기념행사에 참석 후 29일 귀국

● **北·우간다, 교육협력 합의서 체결(3/30, 조선중앙방송)**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간다를 방문한 가운데 북한과 우간다가 28일 교육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과 친선모임 개최(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베트남 정부간 문화협조협정 체결 30주년을 맞아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과 친선모임이 27일 금성학원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모임에는 레 반 꾸 베트남 대사와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글린포드 유럽의회 의원 방북(3/27, 조선중앙방송)**

- 방북 중인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27일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쿠바대사, 평양서 美감금자 석방촉구 회견(3/27, 조선중앙통신)**
 - 호세 마누엘 몬타노 북한 주재 쿠바대사가 27일 평양의 대사관에서 미국에 감금된 쿠바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몬타노 대사는 “세계의 모든 진보세력이 앞으로 쿠바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달라”며 “쿠바 인민이 미국의 악랄한 봉쇄책동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굴함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가 북한과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자회견의 내용이 ‘반미’를 소재로 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임.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北, 김하중 통일부 장관 거듭 비난(3/29, 통일신보; 조선중앙방송)**
 - 통일신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확장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킨 것을 “망발”이라고 비난하고, 개성공단 사업이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친미사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
 - 신문은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도 한미동맹 강화론에 대해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해치고 나가서 온 겨레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 또한 남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미·일이 최근 ‘3국 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 구성을 다그치며 3각 군사동맹 조작 책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
- **北, 김태영의장 핵공격대책 답변 취소·사과 요구(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도
 - 통지문은 특히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



해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위임에 의하여” 이 같은 입장을 통지했다고 보도했으나, ‘위임’의 주체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을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보냈다고 보도

● **北, ‘한반도대운하’ 첫 비난(3/29, 통일신보; 3/30,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통일신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아무런 실용가치도 없는 인기올리기 공약”이며 “민심 기만극”이라고 비난, 30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 최근호(3.29)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이 남한에서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며 이 계획의 모델로 제시된 독일의 MD운하(마인-도나우운하)의 성과와 현주소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
- 신문은 아울러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허리를 펴 수 없는 세금부담을 들썩우고 생태환경 파괴로 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후대들에게 파괴된 터전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 중의 죄악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 南의 인권문제 제기 거듭 비난(3/1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부 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한 것에 대해 “동족에 대한 적대적인 도발”이라고 비난, 신문은 ‘어울리지 않는 인권 타령’이라는 글에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리고 제도를 흔들어보려고 꾸며낸 궤변이고 모략극”이라고 주장

● **선제타격 개시되면 모든 것 잿더미(3/3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30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북한의 핵공격 대책 관련 답변에 대해 취소·사죄하지 않으면 모든 남북대화가 전면 차단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
- 군사논평원은 이날 ‘남조선군 당국자들은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장의 발언이 “현 남조선당국의 새로운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논평원은 “그의(김 의장) 폭언은 곧 현 남조선 당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현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대북정책에



대해 논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라고 지적

- 논평원은 “지금 남조선 군당국이 선제타격 폭언을 놓고 잘못 보도된 것이라느니 순수 군사적 조치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여론의 확대를 막아보려고 구구히 변명해 나서고 있으나 쏟아놓은 물은 담지 못한다”며 김 의장의 발언을 “결코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 (북한) 군대는 호전광들이 선제타격을 가해 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의 핵기지를 노린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하여서도 그보다 더 신속하고 그 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또 “대화 상대방에 대해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는 자들과 백번 마주앉은들 무엇을 토의하고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화과 전쟁이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드팀없는(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 논평원은 “불질에는 불벼락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며 고유한 전투적 기질”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아울러 “북남관계 발전에 초래될 엄중한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군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나. 남북교류

- 남북관계 경색 조짐에도 민간단체 방북은 계속 진행(3/29, 연합)
 -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3~4개 남측 민간단체 대표단이 29일 오후 3시께 중국 선양(瀋陽)의 타오셴(桃仙)국제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 JS-156편을 타고 평양에 입국, 이날 선양을 통해 방북한 민간단체 대표단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 12명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진입(3/28, 연합)
 - 탈북자 12명이 27일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진입했다고 박재현 대사가 28일 발표, 박 대사는 28일 “여성 11명과 남성 1명의 탈북자 12명이 27일 오전 11시께 한국대사관에 들어왔다”고 밝히고 “인도주의와 국제 관례에 따라 이들의 희망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
- 北, 퇴거요청시 “상부지침이라고만 설명”(3/27, 연합)
 - 북측은 3월 24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개성의 남북 교류협력협회사무소(경협사무소)내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할때 ‘상부의 지침’이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27일 “리인호 북측 경협사무소장이 24일 처음 구두로 철수를 요구하면서 ‘상부의 지침’이라고만 설명했다”면서 “자신들은 해석의 권한이 없으니 이



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언

- 이에 대해 우리 측 경협사무소 당국자들은 북측의 철수 요청이 남북간 합의사항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서면으로 북측 입장을 정식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었음. 정부 소식통은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우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은 확고했다”면서 “24일 첫 퇴거 통보 후 25일까지는 별다른 독촉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준 3일의 말미가 끝나가는 26일 재차 퇴거를 요구했다”고 설명
- 북한이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약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 인원의 철수를 요구, 11명 전원이 27일 철수
 - * 2005년 7월 남북이 채택한 ‘경협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경협사무소의 활동 보장’ 조문에는 ‘북측은 당국간 회담대표단의 출입절차 및 신변 안전을 남측 경협사무소 인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돼 있음.
 - * 2004년 1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채택한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신변안전보장 조문에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조사하고 (중략)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며 강제 퇴거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 광주 기아차노조-농민회 통일쌀 공동경작(3/27, 연합)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북한동포에게 지원할 쌀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회와 공동으로 쌀농사를 경작, 기아차광주공장노조에 따르면 북한 동포들에게 보낼 쌀을 마련하기 위해 노조와 전남 구례군 농민회가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6만6천㎡의 논을 마련,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
- 이들 두 기관의 통일쌀 공동경작 행사는 올해로 2회째로 작년에도 같은 논에서 40kg들이 50가마의 쌀을 수확, 북한에 보낸 바 있음.

●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찬성할 예정(3/25, 연합)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열릴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비로봉 관광 4월 중순부터 실시(3/25, 연합)

- 내금강의 비로봉 관광이 4월 중순부터 실시,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아산은 내금강 관광을 4월부터 재개하는 대신 비로봉 관광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비로봉에 대한 최종 답사를 할 예정



● 코레일, 北에 연탄 5만장 전달(3/24, 연합)

- 코레일은 (사)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3월 26일 북한 개성 봉동역에서 북측에 연탄 5만장을 전달한다고 24일 발표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柳외교 “6자회담 개최 방안 협의할 것”(3/25)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방미목적에 대해 4월 중순 예정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미동맹 강화 문제, 북핵문제, 6자 회담 조속 개최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 이어 학계 인사 등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

● 힐 차관보 내주 방한...북·미 접촉 여부 주목(3/26)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가 아시아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창립기념 행사(4.1~2)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방한 예정
- 현재 뉴욕채널을 통해 진행 중인 북한과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한 협의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김계관 부상과의 접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는 25일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강연에서 이달 초 제네바회담 이후 뉴욕채널을 통해 핵신고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

● NHK, “북핵, 中·美에 분리신고 타협안 검토”(3/27)

- 북한 핵신고 문제와 관련, 플루토늄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우라늄 농축계획, 시리아 핵기술 제공 문제는 미국에 신고하는 타협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NHK방송」이 보도
- NHK는 회담 소식통이 “북한이 과거 우라늄 농축계획과 시리아에 핵기술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제네바 북미협상과 이후의 비공식 접촉에서 이 같은 타협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언
- 그러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에 대한 핵기술 제공을 철저히 부인

● 한·미·중, 대북 핵신고 압박 공조 강화(3/27)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며 경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런



- 현안이 해결되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
 - 유명한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신고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를 상기시키면서 북한 측에 조속한 시일 내 완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을 촉구
 - 유 장관은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라이스 장관도 “정말 (북핵문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신고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 남북, 6자회담 에너지 실무접촉 개최(3/27)

- 남북한은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접촉을 개최, 10·3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협의
- 남측 권용우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과 북측 진 철 국가계획위원회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대북지원 설비 자재의 품목이나 구체적인 사양 등을 협의
- 북한은 비핵화조치 중 불능화는 80% 이상 이행된 반면 나머지 5자가 제공키로 한 경제·에너지 지원은 크게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출하면서 불능화 진척 속도를 조정

● 美의회보고서, “핵 불능화 과정서 北 강경파 반발 징후”(3/27)

-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 이행과 관련, 북한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적잖이 감지되는 상황이라고 미 의회 보고서를 인용 보도
- 보고서 작성자는 리처드 루가(공화, 인디애나) 상원의원 보좌관 키스 루스,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소장으로, 이들은 지난 달 나흘 간 평양을 방문
- 헤커 소장이 작년 농축 우라늄 흔적이 검출된 알루미늄 튜브가 있던 시설을 살펴보고 싶다고 하자 한 북한 당국자는 “군과 산업계 인사들은 미국인에게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알루미늄 튜브가 제공된 데 대해 매우 불쾌해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
- 한편 루스 보좌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외무성이 조속히 핵 협상을 마무리를 지으려 하는 반면 군부는 이에 저항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柳외교 ‘6자회담 8월시한설’ 주목(3/28)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은 27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6자회담이 내달이라도 열려야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6자회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 8월을 차기 미 행정부에서 6자회담이 지속될 지 여부를 결정할 중대 시한으로 제기
- 유 장관의 발언은 우선 북한의 조속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는 데 초점

● 헤커 박사, “北, 핵시설 재가동에 6~18개월 걸려”(3/29)

-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번복하고 재가동하려 할 경우 현재 진행도에선 6~12개월 걸리고, 만일 폐연료봉의 추출이 완료되고 보관중인 새 연료봉이 불능화되거나 팔릴 경우엔 재가동에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방북 보고서에 따르면, 헤커 박사는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재가동하더라도 플루토늄 생산능력은 제한받을 것이라며 “폐연료봉을 제거하고 새 연료봉을 장전할 경우 앞으로 4~6년간 매년 6kg(핵폭탄 한개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 보고서에서 헤커 박사는 “북한은 우라늄농축 연구 노력을 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만 상업적 규모에 근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계속 요구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영변 핵단지에 대한 불능화와 해체가 방해받지 않도록 선 안된다”고 조언

나. 미·북 관계

● ‘北, 시리아 비밀 합의’ 북핵 협상 뇌관 부상(3/25)

-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감안, 북핵문제에 ‘8월 시한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측의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이 협상 진전을 가로 막는 최대 뇌관으로 부상
-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나 북한측이 UEP 문제는 물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있어서도 미국의 요구수준에 맞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리아와의 핵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완강하다”고 언급
- 미국은 UEP 문제와 함께 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 ‘북한의 시인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안(간접시인)’을 놓고 북측과 집중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만일 북한이 시간끌기를 할 경우 미국은 물론 국제사



회도 북핵 협상에 대한 목표수준 조정은 물론 상황 재인식 등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

● WFP대변인, “美 대북 식량지원 WFP와 협의 중”(3/27)

-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폴 리슬리 WFP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
- 리슬리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상당량의 식량을 WFP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고, “WFP가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정부단체(NGO)를 도와 식량배분을 한 경험이 있다”며 미국의 NGO와 협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

● 北, “美 주장 고집하면 핵불능화 심각한 영향”(3/28)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담화를 통해, UEP 문제 등과 관련,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주장
- 담화는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우리나라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협조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꾀본 적이 없다.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결코 부시 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 수 없다”고 주장
- UEP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수입알루미늄의 행처만 밝혀주면 ‘우리농축 의혹’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미국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시편(실험재료)도 제공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고 자신들이 양보했다고 주장
- 또한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도 “시리아의 해당 대상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돼 이 문제는 더 해명할 필요도 없게 됐으니 그저 핵전파를 하지 않는다는 조선 측의 공약을 재확인 해주면 되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

● 라이스 美 국무, “6자회담 통해 한반도비핵화 진전 바래”(3/29)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8일 『워싱턴타임스(WT)』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6자회담 과정이 어려웠고, 때로는 지체되기도 했지만 북한이 핵원자로를 가동 중단하고 불능화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WT는 보도
-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핵 신고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핵기술의 시리아 이전 의혹에 대해 “우리(미국)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우려해왔다”면서 “이 문제도 북핵 6자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리스 장관은 6자회담의 유용성을 역설한 뒤 “상당기간 우리는 시리아에서의 핵확산을 우려해왔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대처하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 RFA, 北 “WFP, 美 식량지원 논의 차 4~5월 방북”(3/29)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의 지원계획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2009년도 식량지원 계획을 북한 당국과 논의하기 위해 4~5월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
- WFP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방북 계획을 “WFP 평양사무소가 내주 중 북한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 시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과 분배투명성 확인 문제 등 새 식량지원 계획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한과 합의가 이뤄져도 식량을 주문하고 구입하고, 수송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수개월이 더 걸린다”며 미국의 식량 지원분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려면 연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될 것이라고 예상

● WP, “北미사일발사, 韓·美에 대한 ‘불만 드러내기’”(3/30)

-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이틀 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한국정부 관계자 11명을 추방하고 6자회담 관련 미국의 태도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28일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은 6자회담 및 대북지원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요구에 대한 불만의 표시하고 분석 기사를 29일 게재
- 워싱턴포스트는 “이들간 북한이 보여준 3가지 불만스런 조치는 최근 까지 상대적으로 조용한 협력외교를 펼쳐온 김정일이 점차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요구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고 해석

다. 중·북 관계

● 신임 北무역상, 中대사와 경협 현안 논의(3/27)

- 27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의 리룡남 무역상은 지난 14일 중국대사관을 방문 류샤오밍(劉曉明) 대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구체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류 대사는 “중조 양국 지도자가 정한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영’ 원칙에 입각해 조선측과 새로운 시기에 걸맞은 신사고로 양국 경협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실질적 협력을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이번 회담은 러시아철도회사 대표단이 11~15일 북한을 방문한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도 관심거리이며, 중국도 동해로 나가는 출해로 확보를 위해 라진항 개발에 북한의 협조를 요청해온 점으로 미뤄 이번 회담에서 작년 9월 북·중 경제무역협조회의의 안건으로 상정기로 합의한



‘훈춘-라선 일체화계획’을 놓고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불배제

● 北·中, 한국 ‘MD-PSI 참여 검토’에 ‘비상’(3/28)

-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28일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PSI와 MD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관계나 대중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
-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한국이 MD나 PSI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참여한다면 동북아정세에 긴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언급

● 北 TV, 라싸 시위장면 방영.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3/30)

- 북한 「조선중앙TV」는 30일 티베트(시짱.西藏)자치구의 수도 라싸에서 발생한 유혈시위장면을 ‘소개편집물’로 방송
- 「조선중앙TV」는 “티베트의 분열주의 세력인 달라이 집단의 음모와 선동에 의해 극소수 폭력배들이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잔인한 파괴, 약탈, 방화, 범죄들을 감행했다”며 중국 측의 입장에 맞춰 시위상황을 설명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0일 라싸에서 발생한 분리·독립 요구 유혈시위 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티베트의 독립을 꾀하고 당면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를 파탄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규정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방위비분담금 논의 여부 ‘주목’(3/2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방문 중 27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군사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미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측 입장을 대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기로 했다. 50대 50의 배분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
- “5월께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본격적인 한·미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



● 柳외교, 미국방문...한·미 외교장관회담(3/25)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방미,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하여 힐 국무차관보 등과 만날 예정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의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한국의 미국 VWP 가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이라크 문제와 코소보 독립승인 문제, 티베트 소요 사태 등 국제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

● 柳외교 방미...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첫걸음’(3/25)

- 외교 소식통은 유 장관의 방미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다소 빠져버렸던 한미동맹이 건재함을 대내외에 확인시키는 한편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외교장관 회담의 논의를 토대로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실무급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에서 미래비전을 채택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언. 특히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PKO(유엔 평화유지활동)와 인권, 대 테러전,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동맹 강화 위해 한국의 美무기 구매자격 격상돼야”(3/26)

-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자격을 ‘NATO+3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입법화하는 게 한국의 안보능력을 증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25일 주장
- 그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은 여전히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2012년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감축 등으로 한국의 역지능력향상 필요성이 증가돼 한국은 상당한 무기구매가 요구된다고 주장
- 또한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으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미 의회가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처리하면 한미 상호작전능력 증진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미국이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
-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 캘리포니아)은 지난 2월에, 상원 키트 본드 의원(공화. 미주리)은 작년 6월에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에서 한국의 자격을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각각 제출.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천50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



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의회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훨씬 용이

● 柳외교, 미국 도착...한·미 외교장관회담 예정(3/2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음달 15~1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해 25일(이하 현지시간) 밤 워싱턴에 도착, 4박5일 간의 미국 방문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
- 첫 일정으로 26일 오전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데니스 와일더 NSC 선임보좌관,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과 조찬,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관련 사항과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등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라이스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다음달 15~19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기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할 예정
- 그는 오후에는 폴 울포위츠 전 국방차관,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저녁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연구소(CSIS) 고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 20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
- 27일에는 게이츠 국방장관과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따라 만나고 존 햄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등 주요 싱크탱크 소속 인사들과 면담
- 유 장관은 28일 뉴욕으로 이동,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등을 만난 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찬을 끝으로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 예정

● 柳외교, 힐 차관보 등과 한미동맹, 북핵 협의(3/2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월라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힐 차관보, 와일더 NSC 선임보좌관, 세드니 국방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과 조찬,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
- 그는 참석자들에게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며 한미동맹 강화의 출발점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 특히 6자회담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힐 차관보는 뉴욕 채널 등을 통한 북측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배석한 당국자가 전언



- 힐 차관보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측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 아직 낙관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으며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
- 유 장관과 참석자들은 또한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비준, 한국의 미국 VWP 연내 가입 등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견 교환

● 韓·美외무, 조속한 북핵신고 촉구(3/27)

- 한미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핵 신고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 측에 조속한 시일 내 완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을 촉구
- 유 장관은 북한의 핵 신고 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언급
- 라이스 장관도 “우리는 북한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북핵문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 신고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
- 라이스 장관은 “북핵 신고서나 부속서류에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활동이 담겨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확산을 우려해왔다”며 북한의 핵확산 의혹도 신고대상임을 강조. 이어 “정확한 신고시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있다는 데 대해 유 장관과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해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거듭 시사
-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도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신고를 마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교역금지법 대상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확인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핵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우리(미국과 한국)는 핵확산 문제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다”면서 “한국 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식량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이지만 매년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100%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는다”면서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큰 필요성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라이스 장관도 “미국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상 믿는다”며 유 장관의 언급에 동의



- 유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내달 중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한국의 비자면제대상국 포함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

● 한·미 외교장관 무슨 얘기 나눴나(3/27)

- 유 장관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동북아 평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 지금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
- 라이스 장관도 “한국과 미국 간의 우정이 한국을 이 자리에 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로 한국은 미국의 최고의 친구”라고 화답
- 외교 소식통은 “과거 10년동안 미국은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에 신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
- 유 장관은 특히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Time and patience is running out)”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북한의 조속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촉구
- 유 장관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국민의 지지 등을 고려해 수행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원칙을 설명했고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유 장관은 회견에서 “식량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큰 필요성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매년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100%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는다”고 언급
- 두 장관은 아울러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비준과 한국의 미국 VWP 연내 가입 등이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
- 라이스 장관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야 미 의회 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 유 장관은 “전문가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언
- 이 밖에 이라크 문제와 코소보 독립승인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권, 기후변화, 대 테러전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핵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언
- 라이스 장관은 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미국과 한국)는 핵확산 문제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다”면서



“한국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유 장관도 “PSI의 취지는 지지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특수한 환경상 현재로서는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언급

● **柳외교, 美상의소장 면담...한·미 FTA 비준에 미 재계 지원 요청(3/2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장을 면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미국 재계의 지원을 요청
-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미 FTA 비준을 직접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미 의회 인사와의 면담은 4월 초는 돼야 가능한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는 장관 방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언급
- 유 장관은 아울러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민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언급. 이 밖에 대구의 2013년 제22차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총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미 재계가 지원해줄 것을 당부

● **柳외교, “한미동맹 견재” 美전문가들에 ‘역설’(3/2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아인혼 CSIS 고문 등 한반도 전문가 20여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유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 또한 지난 10년간 미국 조야가 한·미 간 신뢰에 있어 손상된 부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점을 이해하며 새 정부는 한·미관계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
- 아울러 “한미 FTA 비준과 한국의 미국 VWP 가입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통상·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
- 그는 또 ‘비핵·개방 3000’을 비롯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

● **유엔 ESCAP, “美 경제 침체시 한국에 가장 큰 타격”(3/27)**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7일 발표한 “2008 아·태 경제사회조사”를 통해 한국, 대만, 싱가포르 3개국을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한 대미 수출 하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



● 柳외교, 방미결산...“정상회담 기반 다졌다”(3/2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첫 방미는 미국 조야에 한·미관계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의 호응을 얻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
- 유 장관은 26~27일(현지시간) 라이스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과 주요 양자현안, 범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
- 유 장관은 특파원과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측의 PSI 전면참여 요청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로선 대북관계에 민감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후 정식참여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 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양국 관계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양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없이는 미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는 한계도 실감
- 한·미는 기후변화와 인권문제, 대 테러전 등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공유
- 한·미 정상은 이번 유 장관의 방미를 통해 조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

● 柳외교, 美싱크탱크 주요인사 연쇄 면담(3/2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오전 스트로브 탈보트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오후에는 존 햄프 CSIS 회장, 리처드 솔로몬 USIP 소장,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등을 차례로 면담
- 그는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 학계의 의견을 수렴
- 그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한국의 미국 VWP 연내 가입을 통해 한미동맹이 그동안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역설하며 협력을 당부

● 한·미, ‘PSI 호흡조절’ 공감...방향은 가닥(3/28)

- PSI에 대한 한국의 전면 참여 문제와 관련, 26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밝힌 내용을 지켜본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두 장관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 라이스 장관은 “우리(미국과 한국)는 핵확산 문제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다”면서 “한국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유 장관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리스 장관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PSI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소개한 뒤 “한국 정부로서는 대북관계에 민감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유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러시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며 즉답을 회피

나. 미·중 관계

● 리스, 中에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사태 협상 촉구(3/24)

- 리스 미 국무장관은 3월 24일 중국정부에 대해 티베트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티베트 정책을 고려할 것과 달라이 라마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
- 리스 장관은 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티베트인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선 망명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국당국이 티베트 독립 선동자라며 ‘악마’로 규정하고 있는 달라이라마를 ‘도덕적 표상’으로 치켜세웠음.
- 한편 무케르지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에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인도당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이들의 정치활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中·美, 올림픽 때 외국인 사생활보호 놓고 설전(3/24)

-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가면 모든 호텔 방과 사무실에서 현장 감시원이나 원격 모니터링 장비에 의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호텔 방과 주택, 사무실 모두가 점유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물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항상 감시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4일 친강(秦剛)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와 호텔, 관공서 등에 대해 관련 국제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조치 외에 특별한 보안조치가 없다”고 주장

● 中, ‘부시의 대만총통 당선축하’에 불쾌감 표시(3/24)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부시 대통령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3.22)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화에 나서 그들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줄 것



로 믿는다”고 기대를 표시하고 중국과 대만에 대해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

- 후 주석은 대만의 분리 독립 행동은 중국의 주권 수호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

● 백악관, “부시, 베이징올림픽 참석 변함없어”(3/25)

-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재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없다”면서 “올림픽의 목적이 여러 국가의 운동선수들이 참석해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은 여전하다”고 언급
- 한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티베트의 시위사태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과 관련,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있으며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의 책임감에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

● EU·美, 中에 티베트 무력사용 중단 촉구(3/25)

-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슬로베니아의 안드레이 로가르 주제네바 대사는 25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중국 당국이 티베트 시위대에 대해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시위대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
- 그는 이어 “EU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티베트 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미국과 호주, 캐나다도 최근 티베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

● 부시, 中에 ‘탄도미사일 부품 대만전달’ 직접해명(3/27)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기폭장치를 대만에 보낸 것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명
-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후 주석과 전화로 티베트 사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짧게 언급됐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실수였다고 지적했고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전언
- 부시 대통령이 마이클 윈 공군장관이 국방부 기자회견을 통해 ICBM의 기폭장치에 해당하는 원추형 신관이 주문받은 헬리콥터 배터리 대신 대만으로 잘못 전달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후 주석에 이 문제를 급거 해명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오해를 빨리 풀지 않을 경우 미·중관계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
- 이에 앞서 중국은 ICBM의 신관이 대만으로 전달된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서에서 “우리는 미국측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해 이번 사태로 야기된 부정적인 영향과 막중한 결과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세부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

● 부시, 후진타오에 티베트사태 우려 표명(3/27)

-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티베트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촉구
-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티베트에서 중국 측의 폭력 자제 필요성과 달라이 라마 측 대표단과의 대화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
- 후 주석은 이에 중국은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와 접촉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달라이 라마가 먼저 독립 움직임을 포기하고 폭력과 범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해들리 보좌관은 전언

다. 미·일 관계

● 日 오키나와서 미군범죄 규탄시위(3/23)

- 지난 달 미군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23일 시민 6천여 명이 미군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 전개
- 시민들은 사건이 벌어졌던 차탄 지역에 모여 “오키나와 시민의 권리는 미군기지 관련 사건들로 인해 끊임없이 침해돼왔다”면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日 자위대, 취재기자에 기밀누설 사건 검찰송치 논란(3/27)

- 육상자위대 경무대는 2005.5 중국 해군의 잠수함이 화재로 남중국해에서 항행 불능 상태에 처했다고 보도한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사를 방위기밀 누설 혐의가 있다고 판단, 방위성 정보본부의 1등 공좌(대령)를 정보 제공자로 밝혀내고 검찰 송치
- 이 장교는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요미우리 기자에게 중국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누설, 신문에 사고 잠수함이 중국 해군의 ‘명(明)’급 디젤식 공격형으로 300번대 함정 번호가 붙어있는 등 구체적으로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
- 2001년 개정된 자위대법에 따라 현역 자위대원이 언론에 방위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처음이어서 안전보장을 둘러싼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논란이 제기
- 미국은 이번 정보가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을 통해 알게 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점을 중시, 해상자위대 장교가 이시스함 정보



를 외부에 누출한 사건과 함께 일본 정부 측에 근본적 대책을 요구, 미·일 양국은 작년 8월 군사기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서명

- **美 재무차관, “美-日, 힘 합쳐 中 환율-개방 압박하자”(3/28)**
 - 미 재무부 데이비드 매킨 차관은 27일 뉴욕의 재팬 소사이어티 회동을 위해 준비한 연설에서 “중국 환율 문제에 일본이 관여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면서 위안 가치를 높이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공동 관심 사임을 상기
 - 매킨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로운 환율감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을 일본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시장 논리에 따른 환율 제도로 이행하도록 이 시스템이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
 - 매킨의 발언은 워싱턴에서 2주 후 IMF-세계은행 봄철 합동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나온 것으로 중국은 IMF 환율감시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입장

라. 중·일 관계

- **中-日 재무장관, “만두사건 조기 해결해야”(3/24)**
 -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본 재무상과 세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중·일 재무대화에서 중국산 ‘농약 만두’ 사건의 조기 해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보도
 - 누카가와 재무상은 티베트 사태에 대해 “국제적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세쉬런 재정부장은 티베트 사태의 상황만을 설명. 또 누카가와 재무상은 중국 위안화 환율을 유연하게 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두 사람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일본 방문에 앞서 양국이 정치, 금융 분야에서 ‘전략적 호혜관계’를 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의견 공유

마. 중·러 관계

- **中-러, 북한 라진항 놓고 과거부터 각축전(3/24)**
 - 북·러 양국은 작년 11월말 라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구간 및 라진항 개보수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합영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무절차에 돌입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
 - 북한은 러시아철도주식회사와 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위해 4월 중 김용삼 철도상을 러시아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그간 동해로 나가는 출로 확보 차원에서 라진항 개발에 공을 들였던 중국이 다급한 처지에 봉착



- 중국은 2005.9 훈춘(琿春)의 한 회사가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계약을 체결, 훈춘 취안허(圈河)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진항까지 연결되는 도로 67km 건설 조건으로 라진항 3호 부두와 향후 건설될 4호 부두에 대한 사용권을 50년 간 갖기로 합의, 50대 50의 비율로 조선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 외자유치 통한 도로 및 항만 개발을 추진
- 조선라선국제물류회사 창설에 관여했던 중국측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기에 앞서 양국이 이미 라진항 개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언급
- 북·러 양국의 국경에 걸쳐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출로가 봉쇄됐던 중국도 라진항 사용권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요구
-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전 국가주석도 직접 김일성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라진항 사용권을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중국에는 사활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였음.
-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라진항의 화물처리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 라진항 대신 청진항의 사용권을 주겠다고 중국에 제시
- 중국도 한발 물러서 청진항 사용권을 얻는 대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의주-선양(瀋陽) 철도구간을 경유한 시베리아철도 이용한도를 늘려주기로 합의
- 취안허-라진항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했던 연변(延邊)의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조러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언급
- 이에 따라 러시아가 라진항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북·중 양국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가능성
- 하지만 북·중 양국이 작년 9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에서 ‘훈춘-라선 일체화 계획’을 경험의제로 상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라진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봉쇄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
-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개보수를 위임한 라진항 부두는 3호 부두로 북한이 건설을 추진 중인 4호 부두의 개발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中, 러와 첫 군사핫라인 개통(3/24)

-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와 지난 14일 오후 4시(현지시간) 양국 간 군사 핫라인을 개통하고 차오강촨(曹剛川) 당시 국방부장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이 첫 통화를 실시
-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방중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차오 국방부장 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으나 러시아보다 4일 늦은 18일에야 개통
- 중국의 국방전문가들은 미국보다 러시아와 더 빨리 군사 핫라인을 설



치한 것과 관련, “중국이 러시아와 외국 중 처음으로 군사핫라인을 개설했다”며 “이는 중국-러시아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중국-미국간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

- 중국은 한국과도 지난해 12월 군사핫라인을 설치키로 했으나 아직 미개통

바. 기타

● 印, 핵탄두 장착가능 미사일 시험발사(3/23)

- 인도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그니-1’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PTI통신」이 23일 보도
- 인도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현지시각) 동부 오리사주(州) 인근 섬에서 ‘아그니-1’ 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공적 실시를 발표. 시험 발사된 ‘아그니-1’은 사거리 700km의 중거리 미사일로 장착가능 탄두 규모는 1t에 달하며 이동식 발사도 가능
- 한편, 인도는 작년 4월 사거리 3천km급 중장거리 미사일인 ‘아그니Ⅲ’를 시험 발사

● 中, 대만 대선결과 환영(3/23)

- 중국은 대륙과의 협조노선을 강조한 대만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것을 환영, 대만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안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안도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만 명의의 유엔 가입 국민투표를 통한 대만 독립 시도는 민심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
- 그는 마잉주 후보의 당선에 대해 “양안 동포들의 공통적인 희망인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해 마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
- 「신화통신」도 마잉주 후보가 세창탕(謝長廷) 민진당 후보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됐고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추진한 유엔 가입 국민투표안이 투표율 미달로 결국 부결된 것은 대만 독립에 대한 민심을 얻지 못한 결과라고 23일 보도

● 日, 北미사일 대비 6번째 이지스 구축함 인수(3/24)

-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근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을 갖춘 6번째 구축함을 인수했다고 「디펜스뉴스」가 보도
-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미쯔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이번 구축함은 한국 해군이 작년에 실전 배치한 이지스구축



함인 세종대왕함(7천650t)과 비슷한 7천750t 아타고급으로 14억달러에 달함. 일본은 모두 6대의 이지스구축함 보유

● 미·러·중, 아시아서 전투기 각축전(3/24)

-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과 아시아에서 치열한 전투기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제5세대' 최신행 전투기 구매 추진을 통해 공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의 제4세대 전투기 구매에 눈독
- 미국이 군장비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 무기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을 쓰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가격경쟁을 내세워 추격
- 국제평가전략센터(IASC)의 리처드 피셔 박사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항공기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진입하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언급. 이어 "아시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자국의 영공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분석
- 동남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싱가포르 공군 역시 F-35전투기 구매를 희망
-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저렴한 가격의 제4세대 전투기 FC-1을 공동 개발 중이며,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공중조기경보기(AWACS) 판매를 서두르고 있음.

● 티베트 사태로 印-中 관계 '서먹'(3/27)

- 지난 1월 만만한 싱 인도 총리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관계 개선 노력에 가속도를 내는 듯 했던 인도와 중국이 티베트 사태로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27일 인도 정부가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카말 나스 통상장관의 중국 방문을 예고 없이 취소했다고 보도
- 그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양국 공동 경제그룹 회의에 참석해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문제를 논의키로 예정돼 있었으나, 중국 방문을 취소한 것은 티베트 독립요구 시위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 지난 주 티베트 시위대의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 난입한 사건 이후 중국 정부가 니루파마 라오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를 소환해 고압적인 태도로 항의한 것이 직접적 원인

● EU, 베이징올림픽 개·폐막식 거부 움직임 확산(3/28)

- 중국의 티베트 분리 독립 요구시위 무력진압에 항의,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연합(EU) 3개국 정상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불참 입장을 발표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개막식 참



가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28일부터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회담에서 올림픽 개막식 공동 불참 여부가 의제로 논의할 계획
- 그러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달라이 라마를 추종하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티베트 사태는 중국의 내부 문제일 뿐이며 외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

● 中, 티베트 라싸에서 또 시위 발생(종합), 서방 외교관 방문 중 수천명 참가설(3/30)

- 티베트(西藏)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29일 베이징 주재 15개국 외교관들이 라싸를 시찰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티베트 망명 정부가 주장
- 이날 시위는 증원된 중국군의 지원 아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의 유혈 시위이후 15일 만에 재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티베트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

● 北, ‘북한인권보고관’ 연장 결의 “전면 배경”(3/30)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키로 결의한 것은 “미국의 사측(사주)을 받은 EU와 일본의 반공화국(북한) 정치모략 책동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전면 배경”한다고 주장
- 그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유령 같은 특별보고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 결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정치적 모략 문서”라고 주장, 그러나 이 결의에 한국이 찬성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